

1. ② 2. ② 3. ⑤ 4. ① 5. ⑤ 6. ④ 7. ⑤ 8. ① 9. ① 10. ③  
11. ②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① 17. ④ 18. ⑤ 19. ① 20. ②

### 1. 민주 정치 형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민주 정치 형태 중 (가)는 대의 민주제, (나)는 직접 민주제이다. ② 대의 민주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대표가 정치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에서 유래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③ 엘리트 정치는 직접 민주제가 아닌 대의 민주제에서 옹호할 것이다.
- ④ 대의 민주제, 직접 민주제 모두 다수결의 원리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
- ⑤ 대표가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원리를 불신하는 것은 (나) 주장에 관련된다.

###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를 강조한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한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ㄷ.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중시하므로 정치권력도 법의 아래에 있다.

ㄹ.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는 모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법의 내용이 정당성을 갖느냐를 중시하지는 않는다.

### 3. 홉스의 주장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근대 정치 사상가 중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국가 이전의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므로 인간은 자기 보전을 위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자연 상태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⑤ 홉스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① 홉스를 비롯한 로크, 루소는 모두 국가가 부재한 자연 상태를 설정하고 국가 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②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아 개인들이 갈등을 평

---

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묘사하였다.

③ 흡스는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였다.

④ 흡스는 인간이 자기 보전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었다고 본다.

#### 4.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전형적인 정부 형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ㄱ. 국회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인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행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ㄹ. 국무총리를 두는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 5.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기능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국가 기관 중 A는 국회, B는 정부, C는 대법원, D는 헌법재판소이다. 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한다.

②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④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 6. 정당 제도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 갑국에서 t+1대는 양당제, t대는 다당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t대에 비해 t+1대에 정당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ㄷ.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의회 내 과반수 정당이 없는 t대에는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갑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고 t+1대에는 의회 내 과반수 정당이 있으므로 t대에 비해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ㄷ. 다당제 형태를 보이는 t대에서는 양당제 형태를 보이는 t+1대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많을 것이다.

## 7. 정치 참여 방법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입법 청원의 새로운 방법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법안을 제안하고, 일정 수의 지지를 받으면 해당 상임 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⑤ 국민이 법안을 쉽게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 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방법은 국민들의 입법 제안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의 입법안 제출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

② 국민의 입법 제안이 늘어나는 것과 국회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법안을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것과 국민 여론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④ 사이트에 제시된 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하향식 의사 결정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향식 의사 결정이 중시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8. 자유권과 청구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첫 번째 글에서 ㉠은 개인이 타인의 간섭과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고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이며, 프라이버시권은 자유권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글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을 침해한다고 하였으므로 ㉡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①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②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 9.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원리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②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③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평화 통일 지향 원리의 실현 방안이

다.

④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⑤ 복지 국가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10. 민사 분쟁 해결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ㄴ.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

ㄷ.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소송 제기 이전에 가압류를 통해 강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ㄱ.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야 차용증이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소액 사건 심판은 소송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민사 조정은 정식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 11. 사용자 배상 책임 이해

**정답 해설 :** ②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를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한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① 갑은 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③ 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을은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⑤ 손해에 대한 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12.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 위원회 → 법원'의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⑤ 사례에서 갑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며 행정 소송은 민사 소송,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가 적용된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① 갑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 ② 갑이 제기한 소송은 부당해고에 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제기할 수 없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것은 노동조합도 제기가 가능하다.
- ③ 사용자의 부당해고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 ④ 해고 처분된 갑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 1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 을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 ㄷ.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 문제의 해결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 ㄹ. 국가 간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ㄱ.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 ㄴ. 국제 사회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 14.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④ 우선 변제권은 이사,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갖는다. 을은 정 의 저당권 설정 보다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가졌으므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은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 ①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차인에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②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현 소유주인 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을은 병과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 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2년으로 간주되어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15.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③ 사례에서 갑은 하갯길에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 갑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갑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 ② 갑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갑은 14세이므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다.
- ⑤ 갑의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아니다.

#### 16.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A는 기소이고, B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 ①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처벌 규정이 개정되어 강화되더라도 갑은 행위의 법률을 적용받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기소로 인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 ③ 보증금 납부 후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보석 제도는 기소 후에 활용이 가능하다.
- ④ 배상 명령 제도는 유죄 판결 시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7. 혼인과 상속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④ 갑과 을이 법률혼 관계가 아니고,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A의 경우에는 을에게 상속권이 없으므로 병이 단독으로 5억 원을 상속받는다. 갑과 을이 법률혼 관계이고,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C의 경우에는 을이 단독으로 5억 원을 상속받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A의 경우에 을은 갑의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 ② 갑과 을이 법률혼 관계이고, 유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B의 경우에 을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C의 경우에는 을만 단독으로 법정 상속을 받는다.
- ⑤ B, C의 경우 모두 을에게 법정 상속권이 인정된다.

#### 1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국제법의 법원 중 A는 법의 일반 원칙, B는 국제 관습법, C는 조약이다.

- ⑤ 조약은 법의 일반 원칙, 국제 관습법과 달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법의 일반 원칙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다.
- ②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관습 법규이다.

- ③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④ 법의 일반 원칙, 국제 관습법, 조약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된다.

## 19. 공정 거래 위원회의 기능 이해

**정답 해설 :** ㄱ, ㄴ. (가)는 공정 거래 위원회이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소비자 주권 확립, 경제력 집중 억제, 경쟁 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할 권한을 갖는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ㄷ.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대한 설명이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법률 구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기관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ㄹ. 한국 소비자원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 20.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 <1안> 선거구 1~3에서 의석 할당 정당은 선거구별 유효 투표 총수(1500표)의 20%인 300표 이상을 얻은 A당, B당이고, 선거구 4~5에서 의석 할당 정당은 선거구별 유효 투표 총수(500표)의 20%인 100표 이상을 얻은 A당, C당이다. 선거구 1~3에서 A당은 2석, B당은 1석을 배분받고, 선거구 4~5에서 A당, C당은 각각 1석씩 배분받는다.

<2안> 의석 할당 정당은 선거구별 유효 투표 총수(2000표)의 5%인 100표 이상을 얻은 A당~E당이다. A당 2석, B당 1석, C당 1석, D당 1석을 각각 배분받는다.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현행, 1안, 2안의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현행	1안	2안
A당	2석	3석	2석
B당	1석	1석	1석
C당	2석	1석	1석
D당	0석	0석	1석
E당	0석	0석	0석

ㄱ. A당의 경우 1안 3석, 현행 2석이므로 1안이 더 유리하다.

ㄷ. C당의 경우 현행 2석, 1안 1석, 2안 1석이므로 현행이 가장 유리하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ㄴ. B당의 경우 현행 1석, 2안 1석이므로 유불리가 없다.

ㄹ. D당의 경우 1안 0석, 2안 1석이므로 2안이 더 유리하고, E당의 경우 현행, 1안, 2안 모두 0석이므로 선거 제도 변경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